



EU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 포커스 : EU 집행위원회, 산림전용방지법(EUDR) 간소화 패키지 발표
- 단신
 - [순환경제] EU, 디지털 제품 여권용 레지스트리 시행령 초안 관련 의견 수렴
 - [화학] EU 집행위원회,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 개정 규정 관보 게재
 - [통상] 유럽의회, 개발도상국 대상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채택
 - [보조금] EU, 중동 전쟁 피해 부문 지원 위한 임시 국가보조 프레임워크 채택



주요 경제통상 일정

일정	내용
5.13(수)	글로벌 보건 회복력 이니셔티브(Global health resilience initiative) 발표
5.27(수)	기술 주권 패키지(에너지 분야 디지털화 및 AI 전략 로드맵, 클라우드·AI 개발법, 반도체법2 등) 발표
5.29(금)	EU-중국 관계 관련 집행위원회 논의
6.3(수)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7.1일 발표 예정) 관련 논의, EU 봄학기 발표
6.10(수)	에너지 패키지(전력화 행동계획, 에너지 안보 강화안) 발표, 2027년 EU 예산안 발표
6.15(월)~17(수)	G7 정상회의 개최(프랑스)
6.24(수)	조세 제도(Taxation)-에너지 제품 법제화(Energy product legislation)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7.1(수)	방위 단일시장에 대한 통신문 및 공공조달법 발표



EU 집행위원회, 산림전용방지법(EUDR) 간소화 패키지 발표

- ◎ EU 집행위원회는 본격적인 EUDR 이행을 위해 검토보고서 및 관련 지원 문서 발표
- ◎ 간소화 패키지를 통해 소가죽 제외, 팜유 비누 추가 등 일부 대상 품목 재조정
- ◎ 6.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하고, '26.12.30일부터 EUDR 시행 전망

□ 개요

- '26.5.4일 EU 집행위원회는 EUDR 이행('26.12.30일)을 앞두고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기업의 규정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검토보고서와 관련 문서* 발표
- * 법안 검토 보고서, 위임법(delegated act) 개정 초안, 업데이트된 지침 문서,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구성
- 간소화 패키지는 '25.12월 EUDR 시행 연기를 위한 법안 개정 시 합의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와 공공 협의를 거쳐 추가 간소화 방향과 구체적 조치 수립
- 집행위원회는 이번 패키지 등 일련의 간소화 조치를 통해 EUDR 적용 기업의 연간 규정 준수 비용이 기존 제도 대비 약 75% 감소(81억→20억 유로)할 것으로 기대

□ 주요 내용

① 규제 품목 조정

- '25.12월 합의된 제외 품목과 원자재별 식·생물학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 규제 시행과 공급망 전반의 일관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규제 대상 품목 조정

<검토 패키지의 조정 대상 품목(부속서 개정 위임법 초안)>

구분	원자재	품목	CN 코드
추가 품목	소 (Bos, Bibos, Novibos, Poephagus속 한정)	냉동 소 혀	ex02062100
	커피	인스턴트 커피(커피 추출물·에센스·농축물)	21011100
	팜유 (Elaeis속 한정)	팜유 기반 비누 및 파생 화학제품	ex1516·1518·1520·2905·2915·2916·2921·2923·2924·3401·3824·3907
제외 품목	소	소의 생가죽 및 원피, 가공 가죽	ex4101·4104·4107
	고무 (Havea brasiliensis속 한정)	재생·중고 공기 타이어 케이싱	ex4012(단, ex 40129030 타이어 트레드는 유지)
		중고·재사용 파생 제품(가황고무판·시트·스트립·컨베이어·전동벨트·의류·장갑류 등)	ex4008·4010·4015·4016 (단, 신제품은 유지)
		경질 고무의 폐기물 및 스크랩	ex4017(단, 신제품은 유지)
	목재 (대나무·등나무·기타 목질성 재료 제조 제품에는 미적용)	중고·재사용·제품동봉 포장재 제품(액자·팔레트·건축 및 주방 제품·가구 등)	ex4401~4421·9401·9403·9406 (단, 신제품은 유지)
재활용·폐기물 기반 펄프 및 중고·재사용 종이·판지, 서신		ex 47(단, 신제품은 유지)	
		제품 동봉 포장재 및 마케팅 자료	ex 48

자료 : 대상 품목 부속서 개정을 위한 위임법 초안(링크)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정리

② 공급망 주체별 의무 명확화

- 지침 문서와 FAQ 업데이트를 통해 '23년 입법 이후 간소화 과정에서 도입된 하위 공급망 사업자와 소규모 1차 사업자(MSPO)*, 전자 상거래 업체 등 기업별 EUDR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Micro or Small Primary Operator

<간소화로 도입된 공급망 주체별 EUDR 의무>

주체	의무
하위 공급망 사업자	EU 시장에 이미 실사 선언서(DDS)가 제출된 관련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완성품을 출시하는 기업으로 관련 정보 수집·보관 등 유통업체와 동일한 의무 적용. 단, 비-SME 기업은 정보시스템 사전 등록 의무가 추가되며, 규정 위반 우려가 발생할 경우 상위 공급망 실사 적합성 검증이 필요
소규모 1차 사업자 (MSPO)	산림전용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소재한 소규모·영세 생산자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EU 시장에 직접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MSPO 요건 충족. 일반 실사 선언서 대신 간소화된 선언서를 1회 제출하며, 지리적 위치정보 대신 이와 일치하는 우편 주소 사용 가능
전자·온라인 유통업체	단순 판매 계약 중개 플랫폼은 EUDR 의무 없으나, 자체 판매·풀필먼트 서비스를 겸할 시 케이스별로 공급망 주체 판단. B2B·B2C나 수입·수출, 역내 거래 모두 유통업체 의무에 해당되며, B2C는 소비자가 통관 신고 상 수입자로 표기되더라도 판매 업체가 실제 의무 이행

자료 : EUDR 간소화 보고서와 FAQ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정리

③ 공급망 실사 의무 구체화 및 기업의 실사 지원

- 상위 공급망 사업자는 3단계 실사 이행 의무가 있으나, MSPO 등 산림전용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경우 규제 위반 위험이 식별되지 않는 한,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의무가 면제됨
- 하위 공급망 사업자·유통업자는 실사 의무가 없으며, 거래 파트너 정보 수집·보관 의무만 적용. 비-SME기업에 한해 규정 위반 우려 발생 시 상위 공급망 실사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생산국 관련 법령 준수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추후 생산국별 법령과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 저장소를 각각 구축할 예정. 기업은 해당 정보를 기준으로 초기 검토를 거쳐, 규제 미준수 위험이 높을 시에만 추가 자료 수집 필요

(참고) EU 집행위원회는 EUDR의 대·중 기업 대상 시행일인 '26.12.30일 전까지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품 원산지 국가별 관련 규정 정보 저장소와 EUDR 대상품목에 적용되는 인증 제도에 관한 정보 저장소를 구축할 예정

④ EUDR 정보시스템

- 집행위원회는 EUDR 정보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신규 조치 반영·안전성 확보·데이터 처리용량 확대 등을 위해 현재 시스템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
- 보고서에 따르면 '26.6월까지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시스템을 재가동할 예정이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련 시행법 개정안이 추가로 채택될 전망

□ 향후 전망 및 현지 반응

- 집행위원회는 '26.6.1일까지 EUDR 대상 품목 조정을 위한 위임법 개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채택하고, 예정대로 올해 말부터 EUDR을 시행할 전망

- 집행위원회는 이번 간소화 패키지를 통해 올해 말까지 EUDR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추가 개정 및 연기 가능성을 일축함. 이에 따라 대·중기업은 '26.12.30일, 소기업·초소형기업은 '27.6.30일부터 EUDR이 시행될 전망
- 한편,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등 환경 단체들은 기존 품목이 대상에서 빠질 경우 글로벌 시장·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표하며 가죽 제품의 적용 제외에 대한 우려 성명을 발표

• 자료 : EU 집행위원회(5.4) Euractiv(5.4)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uno@kotra.or.kr)



□ [순환경제] EU, 디지털 제품 여권용 레지스트리 시행령 초안 관련 의견 수렴

- EU 집행위원회는 에코디자인 규정(ESPR, Regulation (EU) 2024/1781)에 따라 구축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용 레지스트리의 세부 운영 방식을 정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중(링크)
- DPP는 ESPR의 핵심 도구로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순환성 관련 정보를 QR 코드 등 디지털 방식으로 표준화해 제공할 예정
- DPP용 레지스트리는 DPP의 등록·검증·식별자 관리를 위한 EU 차원의 정보시스템이며, ESPR 제13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6.7.19일까지 DPP용 레지스트리를 구축해야 함
- 의견 수렴은 4.29~5.27일 동안 진행되며, 접수된 의견은 EU 집행위원회가 시행령 초안을 확정하는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 DPP용 레지스트리 시행령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부 내용
등록 대상 (제1조)	· △ESPR 위임법 적용 제품, △배터리, △건설 자재, △장난감, △세제, △기타 EU 법령상 DPP 등록이 요구되는 제품 등
레지스트리 구성 요소 (제3조)	· 레지스트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API, △검증 플랫폼, △고유 등록식별자 생성 체계, △통관용 상품 코드 저장소, △DPP 서비스 제공자 목록, △데이터 표준 참조 시스템, △로그 시스템, △사용자 식별·권한 체계 등으로 구성
DPP 등록·접근 신원 검증 (제4조)	· DPP 등록은 전자서명·전자인장 등으로 신원 검증을 완료한 경제운영자만 가능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최대 3년, 이후 갱신 필요 · 수리업자, 제조업자, 재활용업자 등 가치사슬 참여자 역시 경제운영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신원 검증을 해야 레지스트리 접근이 가능하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함
DPP 등록 절차 (제8조)	· 경제운영자는 모델·배치·품목 수준 중 제품별 위임법에서 정한 최소 단위에 따라 등록하며, 개별 품목 수준으로 등록 시 배치·모델 식별자, 배치 단위 등록 시 모델 식별자를 함께 연결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등록 데이터의 필수 항목, 의미 적합성, 등록 단위, 상품코드, 전자서명·전자인장 등을 자동 검증하며, 검증 완료 시 고유 등록식별자를 발급함
등록증명 (제9조)	· 경제운영자는 DPP 등록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전자 등록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 등록증명은 생성일로부터 90일간 다운로드 가능하며 재발급 허용
데이터 관리·보존 (제10조)	· 등록 데이터의 생성·수정·삭제 내역은 로그 시스템에 기록되며, 활동 유형에 따라 로그 데이터 보관 기간은 상이함 · 데이터 관리 의심 사고 발생 시 국가 당국의 감사 목적으로 로그가 제공될 수 있음

구분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 참조 시스템 (제11·12조)	· DPP 데이터는 EU 공통 데이터 모델과 의미 정의에 따라 구조화되어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제품군별 데이터 모델·용어 정의·다국어 라벨 등을 제공
기술 지원 (제13조)	· EU 집행위원회는 기술 지원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집행위원회 공휴일에 따른 정상 근무일 및 근무 시간(CEST 기준). 12.27~31일은 긴급 요청에 한해 지원
보안·책임 (제19·21·22조)	· 경제운영자는 등록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및 접근 자격증명 보호 책임을 부담 · EU 집행위원회는 레지스트리 개발·운영·보안관리를 담당하고, 회원국은 자국 시스템 연계 및 국가 당국 접근권한 관리를 담당

자료 : EU 집행위원회 초안을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정리

• 자료 : EU 집행위원회(의견 수렴), EU 관보(ESPR) 등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황준혁(jh10535@kotra.or.kr)

□ [화학] EU 집행위원회,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 개정 규정 관보 게재(4.28)

- 4.28일, EU 집행위원회는 화장품 내 특정 원료의 사용 조건을 개정하는 규정(EU 2026/909)을 관보에 게재
 - 동 규정은 화장품 규정(EC 1223/2009)의 부속서 II, III, V 및 VI를 개정하는 것으로, 향료, 보존제, 자외선 필터, 염모제 등에 사용되는 일부 성분의 금지·제한·허용 조건을 조정
 - 관보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규정 시행에 따른 역내 시장 출시 금지 및 유통 금지 시점은 성분 유형에 따라 상이
- 집행위원회는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분별 관리 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하였음
 - 트리페닐 포스페이트(Triphenyl Phosphate)는 평가 자료 부족으로 잠재적 유전독성(genotoxicity)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화장품 금지 물질 목록에 추가, '27.1.1일부터 해당 성분 함유 제품의 EU 시장 출시가 금지되며 '28.7.1일부터 제품의 판매·유통 금지
 - 벤질 살리실레이트(Benzyl Salicylate), 시트랄(Citral), 아세틸화 베티버 오일(Acetylated Vetiver Oil) 등 향료 성분과 수용성 아연염, 알루미늄 함유 성분은 제품군별 최대 사용 농도가 신설 및 세분화되며 해당 규정 미준수 제품은 '27.1.1일부터 역내 시장 출시 금지
 - HC Blue No 18, HC Yellow No 16, HC Red No 18, Hydroxypropyl-p-phenylenediamine 등 염모제 성분은 산화형·비산화형 등 제품 유형별 적용 한도와 표시 조건이 설정되었으며 별도 유예 없이 즉시 적용됨
 - 암모늄은아연알루미늄실리케이트(Ammonium Silver Zinc Aluminium Silicate)는 데오도란트 스프레이 및 파우더 파운데이션에 보존제로 최대 1%까지 사용 가능하나, 은 함량은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 유예 없이 즉시 적용
 - 자외선 필터 DHHB는 화장품 내 최대 10%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DHHB 내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불순물인 DnHexP의 함량은 10ppm을 초과할 수 없음. '27.1.1일부터 규정 미준수 제품의 역내 출시가 금지되며 '28.1.1일부터 유통도 금지됨

• 자료 : EU 관보(4.28)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노효주(hyoju.no@kotra.or.kr)

□ [통상] 유럽의회, 개발도상국 대상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채택

- 4.28일, 유럽의회는 '71년 도입 이후 50여 년간 운영되어 온 EU 일반특혜관세제도 (GSP)의 향후 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공식 채택*
 - * 찬성 459표, 반대 127표, 기권 70표('26.4.28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
- 유럽의회는 '25.12.1일 EU 이사회와 3년여 협상 끝에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공식 승인했으며, 개정안은 기존 GSP·GSP+·EBA 체계 유지와 인권·환경 기준, 이주 협력 조건 및 모니터링 강화를 핵심으로 함
- 향후 EU 이사회 공식 채택, 서명 및 EU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개정 제도는 '27.1.1일부터 10년간 적용 예정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는 EU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감면 또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일반 개도국 대상 표준 GSP, 국제협약 이행 조건을 충족한 취약국 대상 GSP+, 최빈개도국 대상 EBA로 구성

- 동 개정안은 기존 개발 협력 중심의 무역 특혜 제도에 지속가능성, 이주 협력 및 EU 역내 산업 보호 요소를 도입한 점이 특징
- GSP 수혜국이 EU 내 불법체류 자국민의 재입국·송환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특혜를 일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 평가 절차, 해당국과의 최소 12개월 협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2년 유예 등 절차적 제한 장치를 마련
- 또한 EU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최근 10년 평균 대비 쌀 수입이 45% 증가할 경우 자동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

• 자료 : 유럽의회(4.28), 브뤼셀무역관 보유 자료('25.12.5)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심은정(inji.sim@kotra.or.kr)

□ [보조금] EU, 중동 전쟁 피해 부문 지원 위한 임시 국가보조 프레임워크(METSAF) 채택

- EU 집행위원회는 4.29일 중동 전쟁 여파로 연료·비료·전기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는 EU 경제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위기 임시 국가보조 프레임워크(METSAF)*'를 채택했으며, 동 프레임워크는 '26.12.31일까지 시행 예정
- * METSAF(Middle East crisis Temporary State aid Framework)는 농업, 수산업, 운송, 에너지 집약 산업 등 위기 노출도가 높은 부문을 대상으로 기존 EU 국가보조 규정을 보완하는 한시적 지원 체계
- 집행위원회는 청정경제 전환이 에너지 충격에 대한 장기적 해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취약 부문 지원을 위해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
- METSAF 주요 내용
- (농업·수산업·운송 부문 지원) 회원국은 농업, 수산업, 육상 운송 및 EU 역내 단거리 해상 운송 부문에 대해 연료·비료 가격 상승분에 따른 추가 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상 가능
- (소액 지원 간소화) 실제 소비량 증빙 없이 부문별 연료 소비 추정치, 기업 활동 규모·유형 등 대리지표를 활용해 수혜자별 최대 5만 유로까지 지원 가능

- (에너지 집약 산업) 청정산업딜 국가보조 프레임워크(CISAF) 제4.5절에 따른 임시 전기 요금 경감 제도의 지원 강도를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가능
- (지원 누적) CISAF 제4.5절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최대 절반까지 ETS 국가보조 지침에 따른 지원과 누적 가능
- (절차) METSAF에 따른 회원국 조치는 집행위 통보 대상이며, 집행위는 신속한 승인 절차를 적용할 예정

• 자료 : EU 집행위원회(4.29), Politico Pro(4.29)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강지숙(kjs@kotra.or.kr)

📅 EU 무역구제조치 동향

* 발표일 클릭 시 EU 관보로 연결됩니다.

산업	품목	CN 코드	유형	조치	대상국	발표일
화학	테레프탈산 (Terephthalic acid)	29173600	반덤핑	잠정관세	한국, 멕시코	'26.4.10
철강	철·비합금강 용접관 (Welded tubes and pipes of iron or non-alloy steel)	7306304920, 7306307280, 7306307780, 7306304120	반덤핑	재심개시	벨라루스, 중국, 러시아	'26.4.17
기타	완두콩 단백질 (Pea protein)	2106, 2303, 2309, 3504	반덤핑	잠정관세	중국	'26.4.28
화학	라이신 (Lysine)	292241,230990	반덤핑	재심개시	중국	'26.4.30
화학	아디프산 (Adipic acid)	29171200	반덤핑	관세부과	중국	'26.5.5

📅 EU 분야별 의견수렴

분야	내용	수렴 기간	링크
산업	산업가속화법(IAA) 초안 의견 수렴	3.11~5.7	링크
환경	환경 규제 간소화(옵니버스 패키지 VIII) 초안 의견 수렴	3.12~5.7	링크
에너지	2030년 이후 EU 재생에너지 법체계 마련 위한 의견 수렴	3.20~6.12	링크
에너지	2030년 이후 에너지 효율 관련 법체계 마련 위한 의견 수렴	3.20~6.12	링크
순환경제	핵연료·방사성 폐기물 관리 지침 평가를 위한 증거 수집	3.27~6.19	링크
보건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 구축 관련 위임법* 초안 의견 수렴 * ①신원관리, ②국경간 데이터 교환 요건, ③데이터세트 설명	4.9~5.7	(① , ② , ③)
농업	비료에 사용되는 동물 부산물 원료 확대 관련 위임법 초안 의견 수렴	4.13~5.11	링크
대외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 규정 관련 중간 평가 위한 증거 수집	4.9~5.7	링크
바이오	유전자변형 미생물(GMM) 규제 개정 지침 초안 의견 수렴	4.17~6.12	링크
운송	대형 상용차 실제 운행 내 CO2 데이터 수집·관리 시행령 초안 의견 수렴	4.17~5.15	링크
식품	농식품 안전 규제 간소화 개정 초안 의견 수렴(옵니버스 패키지 X 일환)	4.17~6.12	링크
금융	시장위험 자본요건 조정 위임법 초안 의견 수렴(은행 자본규제 개정 규정 관련)	4.21~5.19	링크
항공	EU 항공 전략(EU Aviation Strategy) 수립 위한 증거 수집	4.23~5.21	링크
해운	유럽 해양법(European Ocean Act) 수립 위한 의견 수렴	4.23~7.16	링크
에너지	유럽 그린딜 패키지에 따른 에너지 보고 의무 간소화를 위한 의견 수렴	4.24~5.22	링크
배터리	배터리 규정 내 휴대용 배터리 분리·교체 요건 면제 목록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4.28~5.26	링크
순환경제	디지털 제품 여권(DPP) 레지스트리 시행령 초안 마련 위한 의견 수렴	4.29~5.27	링크
투자	28번째 법체계(28th regime)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4.30~6.25	링크
순환경제	산림전용방지법(EUDR) 부속서 1 수정·간소화를 위한 의견 수렴	5.4~6.16	링크